

## 미 연방정부의 환경정의 프로그램 소개

<한국일보(덴버) 2003년 10월 29일자 /이향섭 (US EPA- Region 8)>

얼마전 부안 핵폐기물처리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시위가 폭력사태로 이어진 소식을 접하고 환경에 관한 미국은 행복한 나라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콜로라도만 해도 남한의 거의 세배에 이르는 면적에 인구는 10분의 1 정도이니 환경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미연방정부의 업무에 환경정의 프로그램(Environmental Justice Program)이라는 것이 있다. 즉 환경관련 법, 규정, 정책의 개발, 집행 등에 있어서 모든 인종과 경제능력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하자는 것으로, 어떤 집단이나 개인도 환경프로그램의 집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부정적 영향을 부당하게 떠맡아서는 안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환경정의 개념은 연방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시민운동에 의해 발전하였는데, 1982년 노쓰캐롤라이나의 워렌카운티에서 폴리염화페비닐(PCB) 매립지를 주로 흑인 거주지역에 설치하는데 항의하는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민운동으로 인하여 결국 미연방감사국(GAO)이 조사에 착수하였고 미연방감사국은 위해 폐기물 매립지 설치와 설치지역에 살고 있는 인종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잇따른 몇몇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런 일련의 연구결과와 몇몇 사건에 힘입어 1992년 드디어 미 연방환경청 내에 환경평등국이 설치되고, 1994년 2월 11일 클린턴 대통령이 “소수민 및 저소득 사회에서의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행동지침”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함으로써 행정부처간 합동업무반이 조직되고 환경정의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 것이다.

그 성립배경에서도 알수 있듯이 환경정의 프로그램은 환경부담의 불균형, 특히 소수민 주거지역이나 저소득 주민 주거지역이 부당한 몫의 환경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 개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환경정의 프로그램은 그러나 불공정한 환경부담을 발견하고, 평가, 대응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여타 정부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환경정의 개념이 접목될 수 있도록 조언, 안내하고, 양적 및 질적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일, 훈련 및 교육 혹은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하는 일, 또 주정부, 지방정부, 원주민 정부등 각층의 정부와 산업공동체, 주민공동체등 각계의 공동체와 협력하여 정보 공유와 홍보활동을 통하여 공동체가 환경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 등이 환경정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진된다.

현재 덴버에는 미환경부 제 8 지역청이 있으며 몬타나, 와이요밍, 노쓰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유타, 콜로라도주 등 6 개 주와 27 개 원주민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환경정의 업무는 제 8 지역의 중요업무로 환경정의 업무팀은 각계 각층의 정부조직 및 사회단체,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각종 업무추진 및 정책집행에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형평성있는 환경보호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환경정의 프로그램은 미국내에서 소수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한인 사회에 직접 관련된 것일뿐 아니라 매우 유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 환경정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인 사회의 환경문제의 해결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관련 문의 1-800-227-8917